

# 동물진료시 부가세 내는데 보유세 또 내라고?...혜택 있어야

### 민감한 세금문제, 단 두줄로 논란 키운 정부

### 병원비, 보험비 등 실질 혜택 있어야 '찬성'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기 전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동물진료 부가기치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감한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보도자료에는 단 두 줄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설명했다. 보유세 납부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

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렇다 보니 "세금 신설하는데 급급하다", "머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웬 징벌세냐", "제2의 싱글세" 등으로 못매를 맞았다. 농식품부는 '전문기관 등' 표현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확인 결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실질적 혜택으로 보기 힘들었다.

◇ 5년간 동물복지 예산 815억원...동물보호센터 비용 311억원

28일 뉴스1이 입수한 동물복지 종합계획 붙임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총 소요액은 815억2300만원이다.

이 중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비용으로 311억2000만원, 전문기관에는 연구용역 1억원

과 중앙 전문기관 운영비로 50억원을 합친 51억원의 예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관 역할로는 중앙 전문기관은 △전국 단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 실태조사 수행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대체시험법 보급 등 △동물 생산·판매업 유통 동물 이력 관리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제도 운영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등을 계획했다.

지역 전문기관으로는 △동물관련 민원·신고 대응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운영 △맹견 관정 및 공격성 평가 △지역 동물보호시설, 영업장 지도·점검 △동물 소유자 등 대상 현장 교육 과정 운영 △동물학대 격리 여부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그쳤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상당수 사람들이 원하는 병원비, 보험, 반려견공원, 동물등록 지원 등은 없었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증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전문기관 운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 매년 동물진료 부가기치세 481억원 이상...'사용처 불투명'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미 동물진료비에 10%의 부가기치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6년 윤호중 의원 등이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위해 발의한 부가기치세법 개정안 검토보

고서에 따르면 수의사 진료용역 면세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액은 2017~2021년까지 연평균 48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수치는 개의 성대수술 등 성형목적의 4개 수술을 제외한 것이다. 현재 세수는 매년 700억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조차 해당 세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세를 올리고 정작 금연에 산을 줄인 정부가 유기동물을 아우

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어디다 쓸지 의문"이라며 "반려동물은 생명이자 가족이지 사치품이 아니다. 동물진료 부가세도 철폐해야 하는 마당에 반려동물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세금은 논란만 부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된 혜택과 지원이 있다면 반려동물 가족들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병원비 등을 지원해야 유기동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황해청, 포승(BIX)지구 분양·현덕지구 조기 활성화 총력전

### 포승, 4차산업 입주업종 추가·현덕, 대장지구 개발사려 도입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평택 포승(BIX)지구 분양 및 현덕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 포승(BIX)지구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 및 친환경미래자동차 산업 유치 강화를 위한 입주업종을 추가하고,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분양 방식을 공모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특히 부품·소재·장비 해외 기술기업 유치 및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협회와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덕지구에 대해선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려를 도입한다.

대장동 개발사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



장동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온 개발이익금 5000억원을 성남 1공단 부지 매입 및 공원 조성 등으로 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을 말한다.

이 지사는 이를 근거로 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민선 7기 주요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황해청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현덕지구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시흥 배곧지구가 오는 6월 최종 확정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과 함께 4차 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황해경제청은 곧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무인이동체 R&D 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이 이뤄지면 2022년 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성태 황해청장은 "올해 안에 평택 포승(BIX)지구 사업을 준공하고 현덕지구 정상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라며 "이울러 시흥배곧지구를 4차 산업의 혁신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해경제청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평택 포승(BIX)지구내 입주계약기업의 착공과 함께 개청 10년 만에 대규모 투자설명회의 성공적 개최, 시흥 배곧지구 신규 지정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 입주 기업 편의 제공 및 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평택 포승(BIX)지구 부지조성공사(도로,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를 지난해 12월 말 조기 완료했다.



## 조선 선비들의 정월 생활상 첫 공개

### 한국국학진흥원, 일기 통해 새해 일상 알려

"조선 선비들도 정월 초하루에 과음을 했을까. 또 선비들도 신년운세를 봤을까"

조선 선비들의 정월 초하루 일과와 생활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기자료가 최초로 공개됐다.

24일 한국국학진흥원이 설을 맞아 공개한 일기자료에는 조선 선비들은 정월 초하루 제사를 지내고 세배를 다니며 세주를 마시는 일상의례뿐만 아니라 운세를 보는 내용 등도 기록됐다. 유교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선비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이색적인 관습들을 엿볼 수 있으며 이들이 관계 맺는 가족과 공동체의 모습도 흥미롭게 묘사됐다.

◇제사는 정성이 중요...설달그림에 제사를 지낸다

1733년(영조 9년) 12월 30일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권상일(1679~1759)은 정월 초하루가 아닌 설 전에 가묘(家廟)에 제사를 지냈다.

권상일은 '청대일기'에서 "정성이 있으면 귀신이 있고 정성이 없으면 귀신이 없다"라는 주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일기를 통해 "설날 아침에 제사를 지내면 세배를 다니느라 세주(歲酒)를 마셔 마음이 흐트러진다. 이 때문에 정월 초하루 제사는 설날그림에 지내고 설날에는 아침 일찍 떡과 탕을 마련해 차례를 지내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설날 과음한 선비의 반

성...역질로 제사를 못지내기도

설날에는 아침 일찍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친척 어른을 방문해 술을 받아 마시거나 사당을 찾는 것이 선비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제야무리 선비여도 술을 마시면 행동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1615년(광해군 7년) 1월 2일 장흥효가 쓴 '경당일기'에는 "과음으로 심지(心志)를 어둡게 하였고 위의(威儀)를 잃었다"고 반성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 역질(전염병)이 돌아 설날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김강계가 쓴 '매원일기'에는 "1610년(광해군 2년) 경술년 새해가 되었지만 집안에 역질(전염병)이 돌아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형제들이 사당을 보며 참배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선비들도 신년운세를 보았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새해의 복운을 기원하며 시초점(蓍草占·산가지나 서죽으로 셈하여 치는 주역점)을 활용해 운세를 보았다.

1846년(헌종 12년) 서찬규(1825~1905)는 정사년 설날을 맞아 닭이 울 무렵 조모와 부모님께 세배하고 차례를 지낸 뒤 점을 친 내용을 자신의 '암재일기'에 적어 놓았다.

## 정총리, 인천신항 방문 "물류인프라 효율성이 수출 경쟁력"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국가수출입물류의 핵심 인프라인 인천신항을 방문해 "항만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화물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등 물류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터미널 운영사 대표로부터 인천 신항 수출입화물 운영현황을 들은 뒤 "정부는 선박 대형화 등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인프라를 신속히 정비하고 자동화 등 물류스마트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의 이날 방문은 설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근무중인 수출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본인이 민간기업에 다닐 때 직접 현장을 누빈 수출선수로서 많은 항만을 방문했다"면서 "인천·부산항 등 수출현장에 오면 가슴이 뵈다"고 했다.

뉴스1



설날엔 민속놀이

설을 맞이해 제주목관아 일원에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난 2017년 추석 제주시 제주목 관아지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산책과 민속놀이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철원 찾는 두루미 서식지 보전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9일 오전 11시 강원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에서 두루미 서식지 보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관내 녹색기업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벗짚존치 등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두루미 서식지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원주권역 녹색기업협의회, 철원군,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 지역주민이 참여한다.

철원 민통선 내 경작지, DMZ 내부 습지 및 한탄강 일대는 전세계 두루미류 15종 중 두루미(멸종위기 I 급), 재두루미(멸종위기 II 급) 등 7종을 포함 거러기, 오리류 등 겨울 철새의 주요 월동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철원군 등과 함께 개발로부터 두루미 서식지를 보전하고자 2015년부터 민·관 협업 겨울무늬조성, 벗짚존치 등 서식지 보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마다 수확이 끝난 철원읍 내포리 등 약 30만㎡ 규모의 논에 물을 가뉘 무늬를 조성하고 우렁이 등 먹이를 제공해 철원 도래 두루미류의 안정적인 휴식지 및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